

韓國의 經濟成長

林 鍾 哲*

.....<目 次>.....		
I. 經濟成長의 鳥瞰	II. 經濟體制 및 經濟政策	III. 高度成長의 陰影
1. 成長率	1. 經濟體制	1. 農工間 隔差의 擴大
2. 產業構造	2. 經濟政策	2. 都市・農村間의 生活隔差
3. 國民所得과 그 分配		3. 大企業과 中小企業
4. 國民所得의 支出		4. 實質賃金의 下落
5. 產業部門別 成長		5. 인플레이션
		6. 金融의 偏重
		7. 不安定한 輸出構造

I. 經濟成長의 鳥瞰

해방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1946~61년의 前期와 1962~현재까지의 後期로 二分하여 고찰할 수 있다. 前期는 다시 1946~52년과 1953~61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고 1962년이후의 기간도 適宜하게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論理的으로나 分析的으로나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해방 이후의 경제발전을 體制政策의 변화를 중심으로, 國民計定諸指標의 뒷받침에 의거하여 分析 評價해 보고자 하고 있으므로 1953~75년을 대상기간으로 한정하고 이를 1953~61년의 前期와 1962~75년의 後期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成長率

이 두 期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成長템포의 相異이다. 1953~61년의 9년간에 있어서는 6·25動亂의 異變로부터 經濟活動의 水準을 復舊시킨다는 「戰後回復要因」이 크게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간을 통한 연평균 성장율은 4.4%에 불과하였으며 대량의 외국원조受入과 풍년이 겹쳤던 1957년에 있어서조차도 경제성장율은 7.7%에 이르렀을 뿐이었다. 이에 반하여 1962~75년간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9.4%를 기록하여 前期의 연평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균 성장율을 2.1배 이상 뛰들었다. 더구나 1953~61년간의 경제성장율이 豐凶등 經濟外의 인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해마다의 脣落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1962~75년간에 있어서의 그것은 그 역시 비록 다소의 변동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1962~66년간의 연평균 7.8%에서 1967~71년간의 10.5%를 거쳐 1972~75년간의 11.0%로 추세적으로 成長率을 높혀감으로써 高度成長을 定着시키고 있다. 물론 後期에 있어서는 自然的 要因에 의한 第1次產業의 成長停滯가 전체로서의 성장을 鈍化시킨다는 현상은 非一非再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成長寄與率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즉 1954~61년간에 있어서는 최고 101.6%, 최하 마이너스 656.7%에 달함으로써 오히려 負의 값을 기록했던 제1차산업의 成長寄與率은 後期에 와서는 연평균 7.9%란 풀러스의 成長寄與를 하고 있다. 한편 제2차산업의 성장기여율은 후기를 통하여 39.7%이었으며 나머지 52.4%의 성장기여가 서비스产业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表1에서 보듯 產業別 成長寄與率은 제2차산업이 1962~66년의 30.3% 평균에서 1967~71년의 39.3%를 거쳐 1972~75년의 48.0%로 그 크기를 提高시켜갔음에 반하여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중 60.0%에서 57.9%를 거쳐 40.0%로 작아지고 있어 그간의 成長패턴을 示唆해주고 있다. 表1에 의해 1953~75년간의 한국경제성장을 概觀하건만 安定의 成長을 저해하여 왔던 제1차산업이 한편으로는 그 不安定性을 제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國民經濟의 比重을 크게 하는 가운데 成長의 安定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과 整備를 1960년대까지 先行시킨 제2차산업이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의 主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表 1. 產業別 成長寄與率 (1962~74)

(단위 : %)

제 1 차	제 2 차	서 비 스
1962~66	9.7	30.3
1967~71	2.8	39.3
1971~75	12.0	48.0
1962~74	7.9	39.7
1954~61	-50.5	63.0
		87.5

자료 : 한국은행

濟的 比重을 크게 하는 가운데 成長의 安定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과 整備를 1960년대까지 先行시킨 제2차산업이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의 主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產業構造

이 같은 產業間의 相異한 성장기여는 產業의 相異한 成長에 기인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산업간의 상이한 성장율이 產業構造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두 말 할 것도 없다. 1953년만 하더라도 제1차산업이 附加價值총액중 차지하면 비중은 47.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제2차산업은 7.2%에 지나지 않았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45.7%이었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중 社會間接資本部門은 고작 3.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2.2%가 기타 서비스部門이었다. 결국

이 때의 한국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서비스산업(=2차산업<서비스산업<1차산업)이란 가장 유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서비스산업에서는 商業만이 廣擴張的으로 커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후진적인 구조는 1961년에 있어서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였으나 그해의 산업구조 역시 1차산업 44.1%, 2차산업 11.9%, 서비스산업 44.0%이었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비중은 고작 6.1%였다. 1962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比重이 永久的으로 逆轉되어 한국의 산업구조는 2차산업<1차산업<서비스產業이란 다소 진보된 내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제2차5개년계획이 끝난 1971년에 있어서는 제1차산업의 비중은 26.5%로서 제2차산업의 24.4%를 2.1%포인트 앞지르고 있으며 1972년에 이르러서야

表 2. 產業構造의 变化

(단위 : %)

1 차	2 차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1953	47.1	7.2	45.7
1962	40.3	13.3	64.4
1967	34.3	18.1	47.6
1972	25.2	26.2	48.6
1975	21.9	33.0	45.1

처음으로 2차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가 26.2%로 제1차산업의 25.2%를 앞지르게 된다. 더 구나 이 해에는 제조업의 구성비가 25.2%로서 농림업의 22.8%보다 2.8%포인트 앞서게 되어 名實 共히 제조업이 농업을 압도하게 되고 제1차산업<제2차산업<서비스산업이란 先進의 經濟構造를 확립하기에 이른다. 한편 1953~61년간을 통하여 평균 5.0%에 약간 미달했던 社會間接資本의 비중은 1962~66년간에도 7.8%에 지나지 않았는데 1967~75년간에는 12.7%로 커졌으며 1975년에는 13.7%로서 농업의 16.2%를 불과 5.5%포인트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히 커간다고는 하지만 鐵工業과 社會間接資本의 비율은 1953~61년의 100대 55.6에서 1962~71년의 58.5로 커졌다가 1972~75년사이에는 오히려 44.5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3. 國民所得과 그 分配

1953년의 國民총생산은 1970년 不變市場價格으로 8,435.2억원이었으며 달러 表示로는 1,361백만달러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國民총생산이 385,600백만달러였으며 日本의 그것이 15,686백만달러, 그리고 필리핀이 3,508백만달러, 태국도 1,790백만달러였으므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所得이 낮은 국가이었던 것이다. 1961년에 있어서조차도 그 기간 중의 遲遲한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國民총생산은 11,848.8억원으로 40.4% 커진데 불과하였으나 달러표시로는 2,124백만달러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의 1인당 GNP는 67달러에서 83달러로 16달러, 23.9% 증가하였을 뿐이다.

그리던 것이 1962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니 1968년에는 20,871.2억 원으로 2兆대를 돌파한 후 1972년에는 다시 30,236.3억 원으로 3兆대를 넘어섰고 1975년에는 41,077.1억 원으로 1961년에 비하여 3.5배 가량 커졌다. 달러 표시 국민총생산은 1966년의 3,655백만달러, 1972년의 8,747백만달러를 거쳐 1975년에는 18,753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1인당 GNP로 1964년에는 102달러, 1969년에는 208달러, 1972년에는 304달러로 커졌으며 1975년에는 532달러로 5백달러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表 3. 國民所得의 比較

(단위 : GDP는 백만달러, 1인당 GDP는 달러)

	1953		1960		1970		1972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韓 國	1,361	66	1,982	80	7,523	240	16,752	475
타일랜드	1,790	68	2,560	97	6,536	190	7,627	210
필리핀	3,508	126	4,513	155	9,538	259	11,659	299
미국	847	41	1,367	91	2,264	82	—	—
日 本	15,686	168	43,097	458	197,686	1,895	299,189	2,797
美 國	385,600	2,134	509,030	2,817	983,240	4,999	1,159,320	5,551

자료 : 한국은행

다음 이처럼 증가된 국민소득의 分配를 살펴보면 1953년에 있어서는 製造業이 發達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서 近代的 產業勞動者 역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複合的인 이유로 말미암아 국민소득중 被傭者 報酬가 차지하였던 크기는 25.1%에 불과하였다. 앞서의 產業構造分析에서도 보았듯이 生産활동의 대부분은 제1차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또 同擴張의인 中小商業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타의 非法人所得의 비중도 16.4%에 달하며 전체로서의 非法人所得은 59.0%에 이르렀었다. 이를 純用자보수와 비법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15.9%가 財產所得이었으며 그 중 法人移轉支拂 및 政府所得등을 차감한 15.8%가 資本의 相對的 分配分으로서 자본가의 處分에 맡기어졌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農業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50년대의 經濟發展을 반영하여 分配構造도 서서히 변화하여 갔으나 1959년에는 純用자보수가 38.2%로서 農業소득 34.2%를 壓倒하게 되고 근로자, 中小獨立商工人 및 農民의 分配分은 86.1%로 1953년에 비하여 2.0% 포인트 커졌으며 法人移轉支拂까지 합하면 勞動의 相對的 分配分은 86.3%로 1953년 대비 2.1%포인트 커졌다. 그러나 1956~57년에 89.0%에까지 달하였던 勞動의 分配分은 1958년 이후 차츰 작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1년 이후에는 급격히 작아져 갔다. 더구나 60년대 이후 제조업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는 1964년의 637천명에서 1975년의 2,205천명으로 3배 이상 커졌고 非農林漁業 전체로서의 근로자도 2,974천명에서 6,405천명으로 2.2배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 보수는 1962년의 36.6%에서 1974년의 36.8%로 0.2%포인트 커졌을 뿐이며 농업소득이 33.6%에서 23.5%로 10.1%포인트 줄어든 대신 기타 非法人所得이 131%에서 23.1%로 10.0%포인트 커지고 있다. 한편 產業의 相對的 分配分인 財產所得을 보면 1953년에는 賃料가 12.4%, 利子가 3.0%, 配當이 0.1%이던 것이 1974년에는 賃料가 3.9%로 크게 줄어든 대신 利子가 5.5%로 커져 가장 중요한 產業所得 형태가 되고 있으며 配當이 1973년 이후 크게 늘어 1971~72평균의 1.1%에서 1973~74년에는 2.2%로 커지고 있다. 農林漁業 대 非農林漁業의 生產額 比率이 4.73% 대 52.7%이던 1953년에 農林漁業 分配所得 대 非農林漁業 分配所得의 비율이 42.6% 대 57.4%이던 것이 生產額 비율이 25.7% 대 74.3%로 마침 1974년에 分配所得 比率이 23.5% 대 76.5%로 바뀌게 된 것은 농업소득을 위해서는 약간의 分配構造改善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용자 보수가 1970~71년의 39.0%를 고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產業勞動者를 위한 分配構造의 악화를 의미한다.

4. 國民所得의 支出

국민소득의 支出을 보면 1953~61년간에 있어 과민의 소비지출이 총생산의 무려 95.6%를 차지하였다. 이를 全體별로 보면 민간소비지출이 84.4%이고 정부소비지출이 11.2%이었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낮은 국민소득과 戰爭遂行을 위한 비생산적 지출등 분기피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限界消費性向은 101.8%에 달하였다.

그러나 1962~75년간에 있어서는 소득증대, 투자율提高를 위한 저축의 강제등 요인이 작용하여 限界消費性向은 84.1%로 떨어졌으며 평균소비성향도 86.8%로 前期에 비하여 8.8%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를 다시 기간별로 보면 1962~66, 1967~71, 1972~75년간에 있어 한계소비성향은 각기 89.7%, 83.7%, 77.3%로 12.4%포인트나 하락하였으며 평균소비성향은 93.1%, 85.2%, 81.0%로 12.1% 떨어졌다. 다시 이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정부소비지출은 비록 國防費支出은 1953~6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지만 計劃的 開發體制의 導入에 따른 정부활동의 증가로 일반적인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다시 국방비의 증가등이 부득이하여서 정부소비지출은 1962~71년간은 10.8%로 不變이다가 1972~75년에 10.6%로 0.2%포인트 하락하여 1962~75년을 통한 정부소비지출은 10.7%이었다. 이는 1953~61년 평균에 비하여 0.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간소비지출은 82.3%에서 74.4%를 거쳐 70.4%로 무려 11.9%포인트나 작아졌으며 그 결과 1962~75년의 민간소비지출은 평균 76.1%로 前期에 비하여

8.3%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민간소비지출의 감소로 말미암아 國民貯蓄率은 해마다 높아갔다. 즉 1953~61년을 통해 연평균 4.4%이던 국민저축율은 1962~66년에는 6.9%로 1967~71년에는 14.8%로 1972~75년에는 18.6%로 커져 갔다. 저축의 형성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보면 1953~61년간에는 국방비등 정부지출은 방대한데 반하여 徵稅기타를 통한 정부수입은 그能力부족으로 크지 못하며 연평균 2.5%의 마이너스의 저축율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민간지출이 6.9%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負의 저축은 1963년까지도 계속되었으나 1964년부터는 正의 저축을 할 수 있어 1962~66년에는 0.7%, 1967~71년에는 5.9%로 提高시켜 갔으나 1972~75년에는 다시 3.8%로 크게 줄어 들었다. 그 결과 국민총저축중 민간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89.9%에서 59.5%로 크게 줄어 들었다가 다시 79.6%로 커졌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계속적으로 그 소비성향을 내림으로써 저축의 국내공급을 증대시켜 왔지만 1953~61년간에는 생활수준회복을 위한 復舊建設을 위하여, 1962년 이후에는 計劃的開發에 따른 成長率提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國內總投資率은 높혀 왔으므로 貯蓄과 投資의 갭은 계속 좁혀질 수가 없었다. 즉 1953~61년간에는 국내저축율 4.4%를 2.7배 이상 뛰어 넘는 12.0%의 국내 총투자가 이루어져 저축투자의 갭은 7.6%포인트에 달했으며 이 갭은 다시 9.7%포인트, 11.5%포인트로 확대되어 가다가 1972~75년에 7.8%포인트로 줄어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방대한 저축·투자의 갭은 海外源泉으로부터의 저축공급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1953~61년간에는 총 백만달러, 연평균 백만달러에 이른 무상의 원조에 의하여 카버될 수 있었지만 원조가 격감한 1962년 이후에 있어서는 1962~66년에는 원조와 차관에 의하여 1967년 이후는 주로 借款에 의하여 메꾸어 나갔던 것이다. 1967~75년간의 借款 및 外國人直接投資導入額은 도착기준으로 6,572.6백만달러, 연평균 730.3백만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表4에서 보듯 저축의 海外依存度는 1953~61년의 63.7%에서 1962~75년의 40.2%로 크게 줄어 들었다.

表 4. 貯蓄과 投資

(단위 : %)

국민저축(A)	민간저축(B)	$\frac{B}{A}$	해외저축(C)	총 투자(D)	$\frac{C}{D}$
1953~61	4.4	6.9	156.8	7.9	12.4
1962~66	9.9	6.2	89.9	8.7	16.6
1967~71	14.8	8.8	59.5	10.5	26.3
1972~75	18.6	14.8	79.6	7.8	26.4
1962~75	13.1	9.6	73.3	9.2	22.9

자료 : 한국은행

5. 產業部門別 成長

表5에서는 볼 수 있듯 해방 후의 한국경제 성장은 제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다. 그러나 工業化에 기초한 경제성장도 1954~66년까지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선행 시켜 가면서 이루어져 왔음에 반하여 1967년 이후에는 鎳工業의 성장이 社會間接資本의 확 충을 앞서고 있다. 1954~66년간에 있어서 社會間接資本의 연평균 성장율이 13.9%로 광공 업의 연평균성장율 12.4%를 1.5%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은 社會間接資本중 특히 에너지 供給의 不足이 격심하였고 이 때문에 產業生產과 國民생활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었기 때 문에 에너지 隘路解消를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이었다. 1967~71년간에도 협의의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연평균 성장율은 19.1%로 1962~66년의 16.9%에 비하여 다시 2.2%포인트 커지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지원하는 직접적 생산활동의 주요한 部門인 鎳工業 성장율은 연평균 20.3%로 사회간접자본 성장율을 앞서고 있으며 이 두 部門간의 成長率 隔差는 1972~75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1966년까지는 일단 에너지供給의 隘路 를 해소하고 그후 다시 高速道路건설과 電鐵化등으로 輸送의 애로 역시 1971년까지는 해소 되었고 오히려 社會間接資本設備의 過剩이 빚어진 때문이다. 한편 기타 서비스部門도 그 성 장율을 1954~61년의 3.0%에서 1962~66년의 6.7%를 거쳐 1967~71년에는 연평균 10.4%로 확대시키는데 이 역시 1967~71년간에 경제활동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流通면에서도 大量生產에 대응할 大量流通(mass marketing) 體制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金融敎育 등 직접, 간접의 支援體制擴大가 요청된 때문이다.

表 5. 產 業 類 別 成 長 率 (단위 : %)

農林漁業	鎳工業	社會間接資本 기타서비스	社會間接資本	기타서비스
1954~61	3.6	11.3	3.8	3.0
1962~66	5.3	14.2	8.4	6.7
1967~71	2.5	20.5	12.3	10.4
1972~75	4.8	18.6	7.6	6.1
1962~75	3.7	17.6	9.5	7.9

자료 : 한국은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工業發展은 工業構造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1953년에 있어 6.7 대 1이던 호프만 比率은 1961년에는 4.0 대 1로 낮아졌고 1968~69년에는 1.9 대 1로까지 작아졌던 것이 1970년에는 2.1 대 1, 1972년에는 2.4 대 1로 다시 커졌다가 1974년에도 다시 2.2 대 1로 줄어 들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重化學工業化가 定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제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低成長하였다고는 하지만 1954~61년의 3.6% 성장에서 1962~75년의 연평균 3.7%란 성장을 기록한 農林水產業의 성장 역시 다른 나라의 성장 기록에 비할 때 결코 뒤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960년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제1차산업의 연평균성장을 4.5%를 뛰어넘는 作國家로서는 필리핀(5.0%)과 태국(5.1%)이 있을 뿐이며 그 밖의 아시아 諸國의 성장을은 한국의 그것을 크게 밀돌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시장규모가 작으므로 그 貿易依存度는 당연히 높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61년간에 있어서는 무역의존도는 1953년의 12.9%에서 1961년의 21.1%로 다소 커졌다고는 하지만 매우 낮았고 더구나 수출의존도는 3.2%에서 6.3%로 커졌을 뿐이다. 한편 무역의 전대액도 수출의 경우 1953년의 39,585천달러에서 1961년의 40,878천달러로 3.3%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345,436천달러에서 316,142천달러로 오히려 8.5% 줄어 들었다. 그리던 것이 1962~75년간에 있어서는 수출의 경우 54,813천달러에서 5,081,016천달러로 무려 92.7배나 증가하여 연평균 수출신장을은 42.3%에 달하였으며 輸出依存도 27.3%로 커졌다. 한편 수입 역시 工業化를 위한 投入輸入의 증가등으로 1962년의 421,782천달러에서 7,274,434천달러로 17.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27.8%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의 輸入依存도는 37.2%로 커집으로써 전체로서의 貿易依存도는 64.5%에 달하였다.

II. 經濟體制 및 經濟政策

1. 經濟體制

1962년 이후의 經濟體制가 混合經濟體制임은 自明하다. 정부 스스로가 計劃的 開發을 국민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民間企業의 創意性과 活動은 이 같은 정부의 開發計劃에 의하여 지도받는 資本主義體制의 도입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1962년 이후의 현실이다. 이에 對比할 때 1953~61년간의 經濟體制는 비록 허다한 規制主義的 要素가 있지만 그것은 분명 自由企業의 原理에 바탕을 둔 經濟體制라고 하여야 한다. 經濟體制란 外面上에 나타난 그 混合의 度 혹은 純粹의 度보다는 體制를 이끌어 나간 擔持者들의 理念的 特質에 의하여 評價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計劃化에 대하여 강한 反感을 가진 李承晚政權時의 經濟體制는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體制라고 특징지워야 한다.

李承晚政權下에서도 農地改革과 같은 社會主義나 改革이 있었고 價格, 金融, 貿易등의 면에서 광범한 규제가 있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品目에 관해서는 배급제도조차 殘

存하였지만 李承晚政權이 시종여일하게 추구한 것은 美國式 自由經濟體制의 확립이었다. 그 때문에 工業資產의 94%이상을 점했던 日本人 소유의 工場이 정부수중에 歸屬財產으로서 들어왔고 1945~60년간을 통하여 2,935.7백만달러의 원조가 受入되었음으로 불구하고 이러한 物質的 基盤을 政府主導的 經濟運行을 위한 手段으로서 결코 利用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해방과 더불어 이땅에 移植된 민주주의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特質的 基盤으로서 미국식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體制의 확립이 必須의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原則를 위해서 다소의 經濟的 不利益도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國聯의 지시에 의하여 戰前 水準으로 생활수준을 높이고 自給的이며 自主的 成長이 가능한 경제로 한국 경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UNKRA의 요청을 받고 Nathan 조사단이 작성한 經濟開發計劃案도 한국정부의 同意와 支持를 얻지 못함으로써流产하고 말았는데 이는 순전히 李承晚政府가 가지고 있던 反計劃的 偏見때문이었다. 물론 Nathan 計劃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던 것은 李承晚을 둘러 쌓은 政治的 支持層 및 그 官僚들의 保守的 性格이라는 政治的인 要因이 외에도 計劃化를 도울 기초적 통계자료의 不備라든가 經濟計劃을 이끌어 나갈 經濟官僚들의 經濟諸量에 대한 計量的 分析能力의 缺如 같은 客觀的인 條件의 不利는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國聯의 강력한 권고를 바탕으로 授援國의 분명한 同意下에 연평균 8.6%라는 높은 成長率을 목표로 한 開發計劃은 정부의 이 같은 反計劃的 偏見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경제가 뒤늦게 計劃化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49년에 농지개혁을 성취시켰던 바와 같은 바이마르 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가 적지 않는指導層人士 속에 살아 남아 計劃化運動의 햇불이 되었다. 둘째 한국 이외의 세계에 있어서는 獨立 이후 10여년에 걸친 경제발전과 國民的 威信昂揚을 위한 노력이 거의 모든 所與國에서 좌절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것이 여러가지 國際的인 움직임을 거친 끝에 1962년 7월 카이로에서 열린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會議에서 선언되듯 資源에 대한 恒久主權과 아울러 國家的 開發計劃의 필요성과 產業의 多角化 그리고 工業化에 대한 热望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全世界的으로 計劃化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끝으로 낮은 成長率과 經濟的 停滯, 對外依存의 증대와 國內資源의 非效率的 利用, 貧富의 隔差擴大와 財閥의 발호 등이 모두 李承晚政權이 추구하였던 自由企業體制의 內在的 缺陷 탓으로 돌리고 동시에 外援減少를 저지할 수 있는 政策變化의 가능한 方向마저도 計劃화와 관련시키려는 現實의 欲求가 不備에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낙 강대하여졌기 때문에 李承晚政權도 1958년에는 前半期 3년 후반기 4년도 7개년에 걸치는 經濟開發計劃의 수립에 착수하여 1959년 이를 완성, 1960년부터 실시하기로 1960년 1월의 閣議에서 議決하게 되었던 것이다.

計劃化를 위한 노력은 민주당정권하에서는 더 한층 강력하게 이루어져 1961년 5월에는 새로운 5個年計劃案이 완성되었고 이案이 기초가 되어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4.19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충만하였던, 빈곤을 제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平等主義의 이데올로기는 計劃의 구체적 실천단계에 있어 생긴 物神崇拜의 錯誤로 인하여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先建設 後分配라는 成長至上主義가 등장하여 計劃化의 本質的內容에는 커다란 變質이 생겼다.

執權과 동시에 「절망과 기아선상에 시달리는 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公約하고 이를 위해 지체없이 經濟開發計劃을 세웠고 經濟開發에 대한 확고한 理念과 意志를 갖고 실천에 옮겼다고는 하지만 共和黨政權이 처음 시도한 것은 經濟的 安定이 있으며 이 政策目標를 위하여 1963~64년에는 제1차5개년계획 내용에 업청난 수정을 가하였고 그나마도 이 修正案에조차도 충실히 하지 않았다. 그후 共和黨政權은 經濟開發計劃에 대하여 차츰 關心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祖國近代化한 理念의 象徵으로서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學生과 知識人 사이에 그 政治的 基盤을 공고히 하려면 강력한 經濟開發計劃의 실천이 必須的인 것이라는 政治的 判断 위에서 수단으로서 이를 소중히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1962~66년간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計劃技術의 迂餘曲折을 거친 끝에 1967년이후는 정부 이니셔티브下의 計劃的 開發이란 새 經濟體制가 확립되어갔다.

2. 經濟政策

1953~61년간에 있어 經濟體制의 第一目標는 自由企業原理에 입각한 市場經濟秩序의 확립에 있었으므로 모든 經濟政策도 그 목표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강구되었다. 우선 歸屬財產으로서 정부수중에 돌아온 막대한 工業資產이 소위 民間企業人에게 거의 무상으로拂下되었다. 이것은 政府의 經濟的 肥大防止를 위해서는 必須的인 措處였다. 둘째로는 日帝末 패시스트的 統制經濟下에 있었던 일체의 規制措置를 없애는 것이었다. 食糧, 石炭등 주요한 物資流通과 관련되어 그리고 物價, 貿易면에서 規制主義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심지어 中央銀行에 관해서조차도 일체의 政府干渉은 궁극적으로는 배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規程이 개정되어갔다. 이것은 市場勢力의 자유로운 作用의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세째 정부수중에 들어온 방대한 外援資金이 거의 贈與와 다름없이 企業人에게拂下되었다. 이것은 經濟運行을 擔持할 主體의 육성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조치였다. 이같이 하여 民間企業은 政策的으로 육성되어 갔는데 戰爭目的의 遂行이란 非常事態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그리고 戰利品과 다름없이 分配된 國有財產 및 外援資金의 處理過程에서의 不公正등으로 인하여 自由黨政權下의 經濟政策은 消費

財產業을 중심으로 한 국소수의 財閥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2년이후의 經濟政策은 財閥依存的인 經濟를 계속시킨다는 점이외에서는 그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첫째 정부는 정부주도하의 計劃的 開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의 經濟權力を 강화시켜 갔다. 政府의 經濟的 收用 특히 投融資의 급격한 팽창은 곧 정부의 직진적인 經濟的 支配力의 확대를 말한다. 둘째 經濟活動部門에 대한 정부의 經濟的統制力を 강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國營企業이 새로이 만들어졌고 기왕의 것도 크게 강화되었다. 1962년이후 새로이 설립된 國營企業은 24개나 되며 生產, 流通, 金融의 모든 部門에 걸쳐 있다. 세째 投資率提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賯蓄增强政策이 취하여졌으며 이를 위하여 갖가지 規制的 金融政策이 강구되고 資本市場育成이 강조되었다. 네째 投資率提高에 따르는 投入輸入을 支辯하기 위하여 강력한 輸出增進政策이 강구되었다. 다섯째 輸出增大를 촉진하기 위하여 低換率政策이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여섯째 輸出로써 支辯할 수 없는 投入輸入의 확보를 위하여 外資導入政策이 다양하게 강구되었다.

이처럼 1962년을 전후하여 經濟政策은 體制의 變化에 相應하여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75년을 통하여 거의 首尾一貫하게 강구된 政策이 세가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는 財閥・大企業偏愛의in 企業育成政策이고 다른 하나는 低農產物價格政策이며 나머지 하나가 低賃金政策이다. 이 세가지 政策은 때로는 카메레온과 같이 色影를 달리하는 수도 있지만 本質的으로는 體制에 상관없이 추구되었다.

III. 高度成長의 陰影

1. 農工間 隔差의 擴大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農業이 상대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은 일찌기 W. Petty에 의하여 지적된 사실이다. 農業이 生產力, 市場構造, 需要彈力性等 여러가지 요인의 복잡된 작용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정체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高度成長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같의 農業의 相對所得감소에 대비하여 적절한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農產物價格支持, 農家所得支持등 여러가지 조치가 곧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農工間의 不均等發展은 일찍부터 예견되어 二重農穀價制가 주장되어 왔고 또 農產物價格支持가 法에 의해 制度化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工間의 相對所得隔差는 表6에서 보듯 1963~75년간에 있어 결코 축소되고 있지 않다.

表에서도 알 수 있듯 農業과 비농업 간의 相對所得은 1963년의 100 : 209.1에서 1966년의

100 : 220.7로 확대되던 것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高穀價政策의 혜택으로 1971년에는 100 : 201.2로 크게 축소될 수 있었다. 그러자 그 후 다시 農林政策이 미스로 100 : 255.9로 벌어진 후 1974년 이후 다시 축소되어 1975년에는 100 : 219.3이 되었지만 相對的인 격차는 1963년에 비하여 확대되고 있다.

한편 農業間 相對所得은 선진국의 경우 1次產業<2次產業<서비스產業이란 구조를 갖고 있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1955년에 있어 이미 100 : 111.1 : 132.2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5년에 있어서 조차도 100 : 225.7 : 215.8 즉 1차산업<서비스산업<2차산업이란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市場에 있어서의 產業間 從事者の 經濟權力의 實態 그리고 이에 대한 適切한 政策規制의 不在를 말하는 것이다.

表 6. 產 業 間 相 對 所 得

(1次產業=100)

	2 次	서 비 스	非農林漁業
1963	249.9	196.5	209.1
1966	269.5	203.8	220.7
1971	215.4	195.7	201.2
1973	277.2	245.6	255.9
1975	225.7	215.8	219.3

자료 : 한국은행

50年代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하다. 產業間 勞動力構造에 관한 통계가 없으므로 相對所得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美國產剩餘農產物의 大量導入에 의한 壓抑效果, 이러한 物量確保에 바탕을 둔 정부의 低農產物價格政策, 1961년에 있어서 조차도 13.4%를 전한데 불과했던 低水準의 工業生產과 그로 인한 工產品에 대한 广泛한 超過需要의 存在 등은 오히려 1962년 이후보다도 實物面에서 相對所得構造惡化를 낳은 要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都市農村間의 生活隔差

도시생활에 비하여 농촌생활은 所得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實物收入이 있고 그 밖에는 經濟理論에서 말하는 報酬의 靜態隔差가 존재하는 것으로 貨幣所得額의 단순한 비교만을 갖고 도시·농촌의 生活隔差를 말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都市民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生活의 便利品 및 奢侈品도 農村都市간의 選好體系(preference structure)의 相異를 생각할 때 그들의 經濟的 福祉에 커다란 相異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諸要因을 감안하더라도 農村과 都市의 生活水準差는 현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近代化가 빛어 놓은 하나의 陰地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同一地域에서 두드러지는

case poverty와는 달리 社會가, 특히 政策이 책임져야 할 insular poverty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農村都市의 家計支出額의 相異로 生活隔差를 측정해보면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현재 1966년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도시민의 소비지출에 비하여 8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生活水準격차는 農工間 相對所得이 개선되기 시작한 60년대末 이후는 추세적으로 줄어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農村都市間 所得隔差는 1968년을 고비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오히려 도시소득을 능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수준도

表 7. 都市農村의 年間家計支出

(단위 : 원)

도 시	농 촌	농촌/도시	농촌지축/도시지축
1966	151,920	109,878	72.3
1968	261,360	143,104	54.8
1970	339,480	207,766	61.2
1972	436,440	309,665	71.0
1974	565,200	435,490	77.1
1975	786,600	646,002	82.1

자료 : 한국은행

6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도 도시·농촌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농촌의 생활수준이 도시민의 그것의 54.8%로 떨어진 1968년에 농촌가구는 도시가구의 4.4배 가까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는 말하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S=Y-C$ 이므로 C가 작아진 해에 S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이지만 1968년의 농가소득은 도시소득의 52.1%로 일찌기 없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해의 農家貯蓄行動의 順理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3. 大企業과 中小企業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自由放任을 추구하던 1953~61년간에 있어서나 計劃的 開發을 추진한 1962~75년에 있어서나 經濟發展의 擔持者로서 혹은 이를 위한 手段으로서 採用된 것은 大企業이었다. 大企業은 體制의 相異에 상관없이 정부의 두더운 庇護下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급성장한 大企業이 市場操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 그리고 大企業의 獨寡品操作이 50년대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自由黨政權이 가진던 自由放任의 경제사상은 獨寡品의 市場操作을 원천적으로 罪惡視하였다. 둘째 급속히 커졌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의 活動分野는 제한되어 있었고 그 제한된 市場에서의 支配力도 크지 않았다. 세째 1953~61년을 통하여 1차 및 2차산업 GNP의 27.1%, 최고 1957

년의 41.9%에 해당하는 援助物資의 投入이 있었고 그 일부가 대기업에 의하여壟斷된에도 있기는 하지 단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려는 정부 노력과 원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원조당국의 노력에 의하여 市場操作은 미연에 방지되었다.

그리나 1962년 이후의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1960년만 해도 製造業出荷額中 대기업이 셰어가 33.2%에 불과했고 종업원 고용률도 23.9%에 불과했으며 섬유제품 및 土石유리製品 제조업에 있어서만 市場의 過半을 차지하던 대기업이 計劃的 開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外換, 租稅, 金融, 行政上의 여러 가지 特惠를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1966년에는 附加價值의 57.5%, 出荷額의 54.1%, 고용자의 39.7%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majority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고 대기업에 의하여 市場의 過半이 차지되는 제조업부문도 섬유제조업, 제지 및 목제품제조업, 製紙業, 化學工業, 土石·유리제조업, 제1차금속제조업, 電氣機器제조업, 수송용機器제조업의 8개 產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더욱 강화되어 1973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업은 제조업총원의 60.5%를 고용하며 附加價值의 72.8%를 생산하고 出荷額의 7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기업이 시장의 過半을 차지하지 않는 제조업은 家具 및 裝置品製造業(20.1%), 金屬製造業(40.9%), 기계제조업(48.3%) 등 20개 제조업분야 중 셋 뿐이며 政府獨占인 담배제조업을 제외하더라도 16개 제조업부문이 대기업의 차지에 들어갔다. 더구나 섬유제조업, 제지 및 목제품제조업, 괴혁 및 혁제품제조업, 고무 및 고무제품제조업, 石油 및 석탄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제조업, 전기機器제조업, 수송용機器제조업 등 8개제조업부문에서는 대기업의 市場割이 75%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小企業이 도태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先進國기준으로 한다면 零細企業에 불과한 것이므로 工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소멸하여 간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문제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또 대기업을 위한 적절한 활동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포기하면서 中小企業이 개척한 기준의 안정된 시장에 들어온으로써 重複投資=資源의 낭비를 수반한 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차지된 市場에서 가차없는 獨寡品操作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實質賃金의 下落

해방후 특히 1962년 이후의 경제성장이 만든 또 하나의 陰地는 근로자의 相對的 地位下落이다. 이것은前述한 바와도 같이 정부가 급속한 工業化를 위한 바탕으로 低農產物價格과 低賃金을 정책적으로 추구한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表8에서 보듯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1960~74년간에 연평균 5.5%씩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經濟成

表 8. 賃金趨勢

(1970=100)

名目賃金	實質賃金	同上昇率	勞動生產性	同上昇率	生產性賃金	同上昇率
		%		%		%
1960	16.7	58.4	—	32.2	181.4	—
1962	20.1	61.1	4.6	37.3	163.8	-9.3
1964	27.9	54.3	-11.1	43.9	126.6	-22.8
1966	39.2	59.9	10.3	51.7	115.9	-8.5
1968	60.3	74.8	24.9	71.6	104.5	-9.8
1970	100.0	100.0	33.7	100.0	100.0	-4.3
1972	137.6	109.6	9.6	117.5	93.3	-6.7
1974	191.8	119.8	9.3	141.7	84.5	-9.4
평 균			5.5		11.3	-5.2

자료 : 한국은행

長率이 8.6%였다는 것, 勞動生產性 上昇率이 11.3%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生產性에 대응한 實質賃金과 國民經濟생활에서의 相對的 地位는 크게 악화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表에서도 보듯 1960~74년간에 名目賃金은 11.5배, 實質賃金은 2.1배 증가하였지만 生產性賃金은 오히려 1960년의 46.6%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勞動所得分配率은 鎳業의 경우 1966년의 59.1%에서 1974년의 53.2%로 하락하고 제조업의 경우 35.9%에서 37.7%로 1.8%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1966년이 全產業근로자의 實質賃金이 가장 낮았던 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조업에 있어 1.8%포인트의 分配率 上昇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絶對水準에 추가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產業間 賃金隔差이다. 1975년에 있어 製造業근로자의 平均賃金을 기준으로 할 때 鎳業근로자 賃金은 1.4배 電氣 및 개스業근로자 임금은 2.7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내부에 있어서도 석유제조업임금은 제조업 평균임금의 3.2배 화학공업은 2.1배, 제1차미금속공업은 1.5배, 음료품, 유리, 제1차철강, 수송기기동제조업은 1.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외복제조업은 65.5%, 도자기제조업은 77.8%, 가구제조업은 80.9% 수준이다

5. 인플레이션

해방후의 한국경제를 괴롭힌 최대의 毒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인플레이션은 분명 行政府의 故意의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 가장 좋은 예로서 우리는 연평균 47.1%에 이른 1954~56년의 인플레이션과 27.6%에 이른 1963~64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34.3%에 이른 1974~75년의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인플레이션의 해 이외에 있어서도 物價上昇은 고삐가 늦춰지지 않았으니 1953~61년을 통한 物價上昇率은 연평균 22.5%이었고 1962~75년간에 있어서의 물가상승율은 연평균 15.2%이

였다.

인플레이션은 50년대에 있어서는 戰時에 특유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62년 이후의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더구나 1962~66년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율이 연평균 16.7%에 달한 대신 國際收支赤字는 연평균 375.6백만달러였던 것이 1966~71년간에 있어서는 國際收支赤字는 연평균 1,072.0백만달러로 커진 대신 인플레이션도 연평균 7.8%로 억누를 수 있었다. 이 기간중만 해도 인플레이션과 國際收支赤字는 代償關係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72~75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율도 연평균 22.4%로 1953~61년기록에 되돌아갔고 國際收支赤字는 1,624.5백만달러로 1967~71년 기록보다도 51.5%나 커졌다. 1962~71년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國際收支赤字 그 어느 한 악을 甘受함으로써 高度成長을 할 수 있었는데 1972~74년에는 그 두 악 모두 겪으면서도 경제성장을은 오히려 1967~71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表 9. 인플레이션, 國際收支赤字 및 成長 (* : %, ** : 백만달러)

	物價上昇率*	國際收支赤字**	成長率*
1953~61	22.5	31.0	4.4
1962~66	16.7	375.6	7.8
1967~71	7.8	1,072.0	10.5
1972~75	22.4	1,624.5	9.9
1962~75	15.2	981.1	9.4

자료 : 한국은행

惡性인플레이션의 進行을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赤字擴大와 外資導入增加 등 對外依存과 競爭力弱化를 가져왔고 對內的으로는 貯蓄감소, 企業의 不實化등 成長潛在力を 잠식하는 한편 農工間, 企業間, 階層間의 逆進的 再分配를 진행시켜 叙上한 陰地를 조성함으로써 경제개발에 대한 國民의인 參與意識을 저해하는 등 諸惡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6. 金融의 偏重

한국경제는 아직도 資本蓄積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他人資本에 의존하는 바 크며 특히 金融機關을 통한 間接金融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直接金融의 길이 강력히 모색되고 있지만 금년도의 목표액이 고작 2천억원이라는 데서 보듯 1975년 말 현재 29,055억원에 이른 간접금융에 비할 바 못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한 金融・財政資金의 撒布에 있어 地域間, 產業間의 偏重이 尤甚하다. 1975년 말 현재 29,055억원의 與信額中 66.5%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며 釜山에는 전체자금의 9.1%가撒布되고 있다. 결국 서울, 釜山의 兩大都市가 間接金融의 무려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나머지 24.4%의 자금도 그중 대략 半에 해당하는 11.6%가 道廳所在地級의 地

方大都市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產業別로 보더라도 1차산업에는 전체의 10.4%가 배정되고 鎳業에 1.2%가 배분되었으며 57.1%가 제조업에 뿐려지고 있다. 그밖에는 8.5%가 건설업, 6.6%가 都散賣業, 3.7%가 運送業, 金融不動產業에 1.7%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2차산업이 전체의 58.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몫을 점하고 협의의 社會間接資本에 12.7%가 배분되고 기타 서비스部門에 18.6%가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資金의 흐름은 產業發展을 政策的으로 誘導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偏重의 탓은 면할 수 없다.

7. 不安定한 輸出構造

1975년 현재 우리의 貿易依存度는 64.5%에 달하였으며 그중 수출의 준도는 31.3%이다. 이러한 對外依存은 우리가 資源不足型 國家인 까닭에, 그리고 高度成長을 지향하는 한 걸고 작아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커갈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1962~75년의 경제성장을 成功적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하는 수출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低迴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譚性值은 계속 줄어 들고 있다. 그 까닭을 우리는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中心의 輸出構造와 美, 日 두나라를 중심으로 한 先進國偏重的 市場構造와 복합된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美, 日등 OECD諸國의 輸入이 重化學工業製品 및 에너지商品 중심적인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輸出商品構造는 55.6%가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이고 7.8%가 勞動集約的 重化學工業製品이다. 1971년 현재 OECD수입은 SITC 5類 및 7類가 32.8%인데 우리 수출구조는 5類 및 7類에 비중이 9.6%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수출상품은 6類 및 8類가 72.5%임에 반하여 OECD수입 중 그 비중은 28.2%에 불과하다. 이러한 輸出供給構造와 輸入需要構造의 不一致가 1962~66년에는 평균 5.0이던 우리의 輸出譚性值를 1967~71년에는 3.3으로 끌어내린 다음 1972~75년에는 또다시 1.8로 크게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輸出商品構造가 輸入市場構造와 一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에 있어서는 先進國市場이 우리 輸出에서 차지하는 쉬어는 79.7%로 1962년의 76.8%에 비하여 오히려 2.9% 커지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는 順貿易偏向의인 우리의 成長戰略도 재검토하여야 되겠지만 市場開拓戰略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產業構造改編에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